

### 교육계·학부모 ‘초등 입학연령 하향’ 반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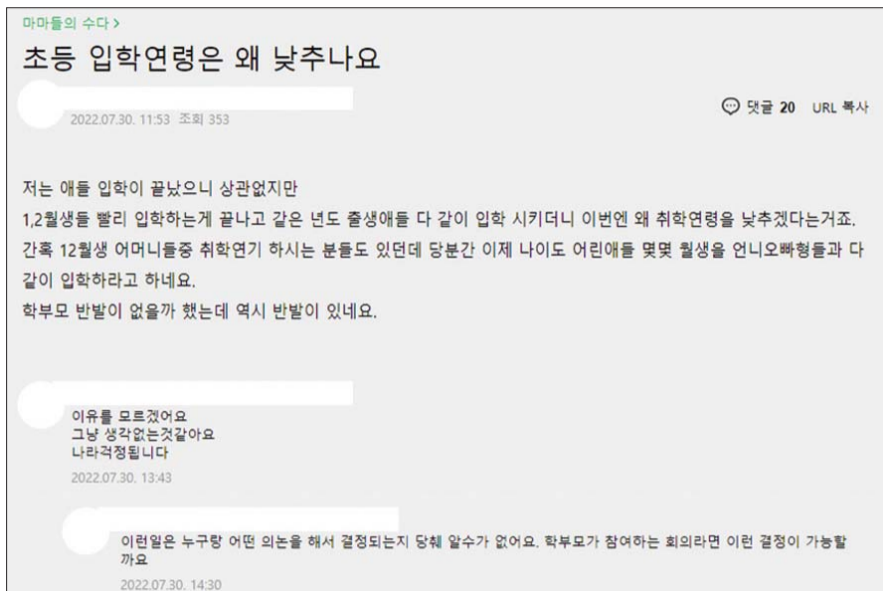
# “교육현장서 요구한 적 없는 정책… 학력격차만 키울 것”

#### 5세 조기입학 부정적 여론 상당 양극화 심화·과도한 경쟁 지적 “아이 고려하지 않은 정책… 황당”

교육부가 현재 만 6세인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겠다고 밝힌 가운데 현장에서는 거센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만 5세 목전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교육 심화와 입시 경쟁 등 다수의 문제점을 일으키고 학생은 물론 교원과 학부모 등 직간접 피해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의 조기 입학 발표에 대해 교육 현장에서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커지며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지역별·가정별 여건 차이로 발생하는 교육 양극화를 조기에 해소하고자 추진됐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교육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앞서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9일 “사회적 양극화의 초기 원인은 교육 격차”라며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사회적 약자 계층이 빨리 의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부총리는 조기 입학 추진을 중심



네이버 맘 카페 게시글 캡처이다. 정부의 초등학교 조기 입학 추진 발표에 부정적인 반응이다. /신하은 기자

으로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초·중·고교 12년 학제를 유지하되 취학 연령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 상황에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시기를 앞당기는 차원에서 취학연령을 낮추자는 논의가 있어 왔다. 그러나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고

국내 교육 현장 안팎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조기 입학 추진 시 특정 시기에 1학년의 학생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도시를 중심으로 한 과밀학급이 더욱 심각해진다”며 “교육 여건은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그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OECD 교육지표 2021에 따르면 2019

년 기준으로 38개 회원국 중 한국을 포함한 26개국(68.4%)의 초등학교 입학연령이 만 6세다. 현재 한국 초등학교 입학 연령 역시 만 6세이기 때문에 타국과 비교해 입학 연령이 낮다고 볼 수는 없다. 프랑스나 이스라엘, 헝가리, 멕시코(이상 3세)처럼 조금 더 이른 시기에 의무 교육을 시작하는 나라도 있지만 대부분 나라는 6세를 평균으로 잡고 있다.

교육현장에서는 국민과 학부모들이 요구한 적 없는, 오히려 피해를 양산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재고해야 된다는 입장이 상당하다. 학부모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벌써 조기 입학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카페 내 게시 글뿐만 아니라 단체 대화방에서도 우려의 대화가 활발하게 오고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맘 카페에서 활동하는 한 학부모는 댓글을 통해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교육 과정도, 교실 환경도, 선생님도 다 다른데 아이들은 고려하지 않고 정책만 획 던져 놓은 것 같아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외의 댓글도 조기 입학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지배적이다.

일부 학부모들은 치열해질 사교육 경쟁에 주목했다. 현재에도 코로나19 장

기화로 인한 교육 양극화 문제는 꾸준히 대두되고 있다. 공교육에서 채우지 못한 교육 공백을 사교육을 통해 메우게 되면서 사교육 유무에 따른 학습 격차가 발생한다는 우려다.

한 학부모는 “8살에 보내는 것도 걱정인데 7살은 너무 어리다”며 “실컷 놀아야 되는 나이에 더욱 피 튀기는 사교육 전쟁을 하게 될 아이들이 무슨 죄냐”고 지적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조기 입학으로 오히려 교육 양극화가 심해질 수도 있다”며 “초등학교 입학 전 선행, 조기 교육 분위기가 크게 나타나면서 현재보다 학력 격차가 더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사교육 전쟁에 대한 우려가 나날이 높아지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입학 연령 하향에 대해 현장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선택이라고 지적한다.

박근병 서울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가장 먼저 아이들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발달 단계에 맞지 않아 성장에 큰 도움을 줄 수 없다”며 “객관적인 조건 상황에서 보면 과밀학급, 교사 수급 등의 여건적인 준비 부족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코로나 신규 확진 7만명대… 더블링 완화 추세

#### 지난달 30일 기준 7만3589명 위중증 284명… 두달만에 최대

연일 ‘더블링’을 기록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주말을 맞아 찾아들며 7만명대로 집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0일 0시를 기준으로 전날 신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총 7만3589명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7일 10만명 최고치를 찍은 이후 28일 8만8000명대, 29일 8만5000명대, 30일 8만2000명대로 발표된 데 이어 나흘 연속 감소세를 걷고 있는 수치다. 특히 30일 신규 확진은 일주일 전인 지난 23일(6만8537명)의 1.2배가량 증가한 수준이어서, 더블링 현상이 완화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주말 사이 위중증 환자 수는 284명까지 집계되며 지난 5월 26일 243



지난달 30일 오후 대구 중구 국제보상운동기념공원에서 관계자들이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있다. /뉴스시

명 이래 두 달여 만에 가장 많은 숫자를 찍었다. 위중증 병상 가동률은 약 27.7%(1598개 중 443개 사용)에 달했다.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 수는 206명이었다.

사망한 코로나19 환자 수는 30일에 35명까지 기록했는데, 지난 5월 28일(36명) 이후 가장 많았다. 사망자 가운데 80세 이상이 20명으로 전체의 57.14%를 차지했고, 70대와 60대가 각

각 6명이었다. 고령층의 중증도 발현이 심해진 것으로 분석되는 상황이다. 다만, 사망자 수는 31일 발표에 따르면 20명까지 내려왔다.

이날 방역 당국에 따르면 해외유입 확진자가 주말 들어 400명에 달할 정도로 늘면서 새 변이 바이러스인 BA.2.75 감염 발생도 증가했다. 30일 발표된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397명으로, 전날보다 42명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사흘 전인 지난 27일에는 해외유입 확진자가 532명 발생하며 국내 코로나19 유행 이후 가장 많은 숫자였다.

현재 7월 말인 만큼 8월 초까지 이어질 여름 휴가철 방역이 관건으로 보인다. 방역 전문가들은 여름 휴가 절정에 이르는 다음주의 확산 규모가 이번 재유행의 정점과 규모를 가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원은미 기자 silverbeauty@

## 中 “코로나 재확산시 다시 강력 봉쇄”

### ● 차이나 뉴스 & 리포트

#### 공산당 정치국 경제정책 회의 ‘제로 코로나’ 대한 입장 강화

경기 침체도 중국의 ‘제로 코로나’ 고집을 꺾지 못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될 경우 언제든지 다시 강력한 봉쇄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며, 목표가 아닌 ‘최선의 결과’를 달성하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경제성장률로 제시했던 5.5%는 이미 포기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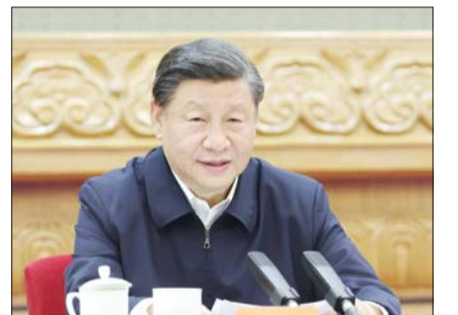
31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정치국은 경제 정책 회의를 통해 “복잡하고 엄중한 대내외 환경에도 코로나19 방역 성과가 긍정적”이라며 “중국은 자신의 길을 갈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과 경제사회발전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전보다 제로 코로나에 대한 입장은 오히려 더 강화됐다.

정치국은 “코로나19 확산세 확인 시 즉각적이고 강력한 봉쇄를 실시해야 하며, 강도가 약해지면 안 된다”며 “버티는 것이 바로 승리”라고 강조했다.

호주뉴질랜드은행(ANZ)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코로나19 변종이 덜 치명적이거나 백신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될 경우에만 바뀔 것”이라며 “두 가지 모두 당분간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하반기 경제 성장에 대한 눈높이는 다소 낮추는 분위기다. 기존 언급한 ‘연간 경제사회발전 목표’ 대신 ‘최고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열린 통일전선사업 중앙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회의는 지난 29일부터 이틀간 열렸다. /신화·뉴스시

고 문구가 바뀌었다.

정치국은 “경제 회복을 공고히 하고, 고용과 인플레이션 안정화에 집중하겠다”며 “경제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최상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당초 목표로 제시했던 연간 경제성장률은 ‘약 5.5%’다. 상하이 등 주요 도시가 봉쇄된 2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4%로 주저앉으면서 사실상 목표 달성은 힘들어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4.4%에서 3.3%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코로나 19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 2.2%보다는 높지만 작년에 달성한 8.1%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도 못미친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불거진 주택 공사 중단과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 사태를 의식한 듯 주택 건설과 인도를 보장하겠다고 언급했으며,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등도 시사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월드컵 호재… 전쟁종식 기대… 시장회복 장밋빛 전망도

### >> 1면 ‘투자 줄이고…’서 계속

삼성전자는 98인치 TV를 비롯한 고급형 제품을, LG전자 역시 올레드 TV 영향력 확대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연말 2022 카타르 월드컵도 기회 요인으로 봤다.

자동차는 희망이다. 반도체 공급난이 해소되는 상황, 시장 침체 속에서도 주

문량은 충분하다는 전언이다. 자동차 생산량이 다시 늘어나면서 막대한 수주 잔고를 남겨놓은 전자 업계도 본격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게 됐다.

당장 LG전자 전자 사업이 2분기 500억 원 수준 흑자 달성에 성공하며 연간 흑자 전환이 유력하며, LG이노텍과 삼성전기 등 관련 업체들도 실적 기대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시장 회복 가능성도 봤다. 중국 봉쇄가 풀리고 있는데다가, 우크라이나 전쟁 역시 금방 해소될 수 있다는 것.

삼성전자도 하반기 전망 불확실성을 강조하면서도 신형 스마트폰 출시에 이어 월드컵 등 호재로 시장이 다시 성장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김재용 기자 iuk@